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여 년간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호소의 수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일정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소음·진동 문제가 환경분쟁 조정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정부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 비중과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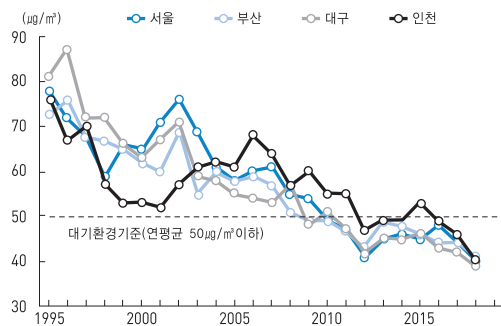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대기, 물환경, 폐기물 등 전통적 환경이슈에 관한 통계를 이용해서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환경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PM₁₀)의 경우 연평균 농도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X-1).

[그림 IX-1] 주요 도시 미세먼지(PM₁₀) 연평균 농도, 199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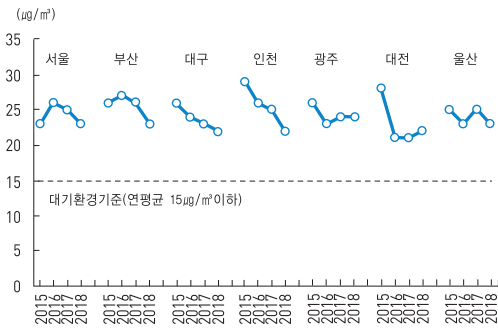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하지만 주요 광역시의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는 20~25µg/m³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15µg/m³)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은 10µg/m³임). 나아가 대기오염측정망을 갖춘 전국 114개



시·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공식적인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는 하나도 없다(그림 IX-2).

[그림 IX-2] 주요 광역시의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 2015-2018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 수준은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하지만 일평균 농도 수준 역시 노약자나 질환보유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나쁨'과 '매우나쁨'을 구분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평균 농도가 81-150 $\mu\text{g}/\text{m}^3$ 이면 나쁨, 151 $\mu\text{g}/\text{m}^3$ 이상이면 매우나쁨이고,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농도가 36-75 $\mu\text{g}/\text{m}^3$ 이면 나쁨, 76 $\mu\text{g}/\text{m}^3$ 이상이면 매우나쁨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지역과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5~30일 정도이고, 매우나쁨 일수는 0~2일 수준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나쁨 일수는 미세먼지보다 두 배 정도 많아서 60일 내외 수준이고, 매우나쁨 일수는 미세먼지의 경우와 비슷하다(표 IX-1).

〈표 IX-1〉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일수, 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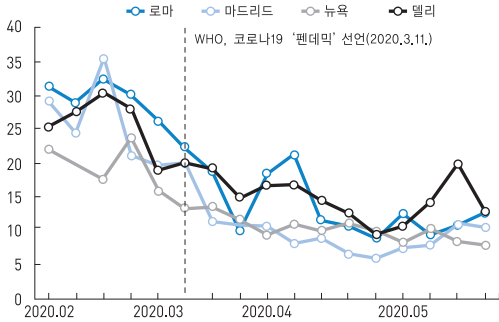
연도	미세먼지(PM ₁₀)				초미세먼지(PM _{2.5})			
	나쁨		매우나쁨		나쁨		매우나쁨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2013	30	26	0	2				
2014	28	32	1	3				
2015	25	21	1	4	62	44	0	0
2016	13	23	2	1	62	73	0	0
2017	14	20	2	2	58	61	2	3
2018	21	21	0	0	58	57	1	4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임을 의미한다. 대기오염과 인간의 경제활동간에 인과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상반기 대기질의 변화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을 경계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대기질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기질의 개선은 평상 시에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개도국 도시(예: 인도 델리)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던 선진국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였다(그림 IX-3).

[그림 IX-3]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질(NO₂ 기준) 변화, 2020.2-5



주: 1) 통계치는 해당 도시 일일 이산화질소(NO₂) 농도 기준 대기질 지수(AQI)의 주간 평균값임.
 2) 대기질 지수(AQI)는 0점에서 50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 오염이 심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임. 0-50점은 '좋음', 51-100점은 '보통', 101-150점은 '민감군에게 나쁨', 151-200점은 '나쁨', 201-300점은 '매우 나쁨', 301점 이상은 '위험'으로 분류됨.
 출처: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https://aqicn.org>).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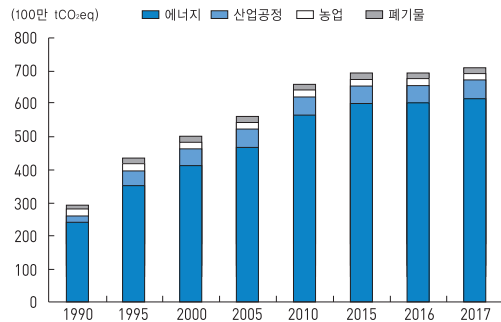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하며, 그 중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효과의 60% 이상을 야기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며, 36개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2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1990-2011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34.2% 증가하였으나(연평균

증가율 4.1%), 2011-2017년 동안에는 3.6%만 증가하였다(연평균 증가율 0.6%).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0%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1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다(그림 IX-4).

[그림 IX-4]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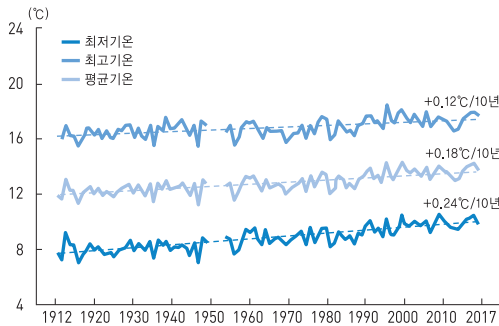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9.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반도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해수면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외에도 온열질환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건강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이상기후 현상의 예는 기온상승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18℃씩 상승하였고, 최근 30년의 연평균 기온

은 20세기 초 30년(1912-1941년)보다 1.4℃ 상승하였다(그림 Ⅸ-5). 이러한 변화 추세를 반영하듯 20세기 초에 비해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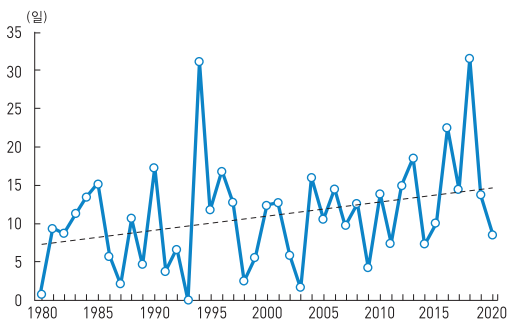
[그림 Ⅸ-5] 연평균 최고, 평균, 최저 기온, 1912-2017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2018.

특히 1980년대 이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1℃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 기온의 상승은 폭염(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 및 열대야(야간 최저 기온이

[그림 Ⅸ-6] 폭염 일수, 1980-2020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각 연도.

25℃ 이상)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폭염 일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Ⅸ-6). 열대야 일수도 1980-1989년 평균 3.5일에서 2011-2020년에는 평균 9.9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물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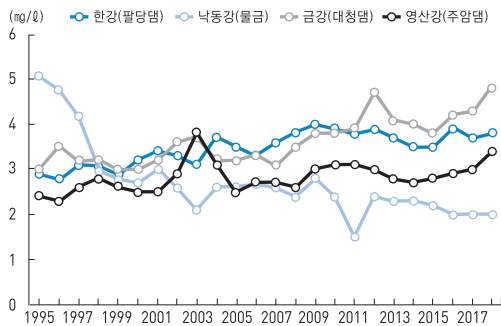
1990년대 초에 낙동강 폐놀 오염사고와 유기 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 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했다. 2006년에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 물'(BOD 3mg/ℓ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낙동강(물금)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995년 5.1mg/ℓ에서 2018년 2.0mg/ℓ로 대폭 낮아졌지만,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영산강(주암댐)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에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Ⅸ-7). 최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대체하는 수질 지표로 부각된 총유기탄소량(TOC) 역시 공식

측정자료가 있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정
체 또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천의 수질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하천
수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
이다. ‘먹는물’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으로 우리나라는 61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 EU 45개).

[그림 IX-7]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8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통상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대표 지표이고, 하천(낙동강 물곡)의 경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대표 지표임.

2) '좋은 물' 기준은 하천의 경우 BOD 농도 3mg/L 이하, 호소의 경우는
COD 농도 4mg/L 이하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먹는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공
급시설의 유형에 따라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구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수도사업자 등)
로 하역금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
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법정검사 외에 지역주
민의 신청에 따라 각 가정에서 먹는 수도수에 대
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
면 정수장이나 수도꼭지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한편 약수터의 수질
기준 초과율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더 나빠지고
있다(표 IX-2).

〈표 IX-2〉 시설별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율, 1995-2018

연도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1995	1,105	3.3	2,513	1.8	590	28.8	3,183	9.0
2000	1,141	0.6	3,611	0.4	590	4.6	7,064	13.0
2005	937	0.5	3,806	0.3	483	5.4	10,120	21.9
2010	969	0.1	4,695	0.0	1,256	1.8	8,688	22.0
2017	5,455	0.2	72,014	0.1	74,097	3.1	4,985	36.1
2018	5,440	0.1	73,001	0.1	71,900	3.6	5,795	34.7

주: 1)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 검사 결과임.

2) 초과율은 해당 검사 대상 시설 중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
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
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
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 들어 1kg 내외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201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2013년 0.94kg에서 2018년 1.06kg으로 증가).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IX-3).

〈표 IX-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8

연도	일반폐기물 (톤/일)			지정 폐기물
	생활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2000	46,438	101,453	78,777	7,615
2005	48,398	112,419	134,906	8,634
2010	49,159	137,875	178,120	9,488
2011	48,934	137,961	186,417	10,021
2012	48,990	146,390	186,629	12,487
2013	48,728	148,443	183,538	12,408
2014	49,915	153,189	185,382	13,172
2015	51,247	155,305	198,260	13,402
2016	53,772	162,129	199,444	13,783
2017	53,490	164,874	196,262	14,905
2018	56,035	167,727	206,951	15,389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생활폐기물은 물질성상에 따라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2018년에 각각 일일 9,467톤 및 8,848톤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종이류나 플라스틱류의 경우

분리배출 되는 양보다 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유리류나 금속류의 경우에는 분리배출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음)(표 IX-4).

〈표 IX-4〉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배출량, 2007-2018

연도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2007	5,586	5,476	405	2,280	2,859	2,378	570	2,455
2008	5,136	5,250	390	2,340	2,703	2,395	439	2,679
2009	4,915	5,164	425	2,264	2,817	2,336	376	2,998
2010	4,783	4,810	411	2,035	2,641	2,234	337	2,793
2011	4,940	4,301	430	1,908	2,644	2,338	330	2,706
2012	5,247	4,486	444	1,866	3,010	2,664	335	2,973
2013	5,383	4,128	499	1,797	3,127	2,574	346	2,890
2014	5,410	4,485	536	1,792	3,370	2,667	392	2,681
2015	5,445	4,514	623	1,693	3,739	2,654	448	2,440
2016	5,632	4,603	561	1,663	4,312	2,960	434	2,487
2017	5,194	4,151	608	1,572	4,601	3,563	399	2,161
2018	5,185	4,282	739	1,308	4,884	3,964	497	2,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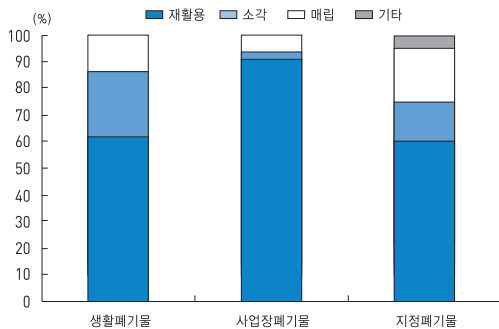
주: 1) 종량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종량제에 의해 배출된 것을 의미하며,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배출된 것을 의미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62.0%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4.6%)되거나 매립(13.4%)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활용(90.8%)되며 소각(2.8%) 또는 매립(6.4%)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60.0%) 비중이 가장



높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소각(14.8%) 또는 매립(20.2%)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 IX-8).

[그림 IX-8]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8



주: 1)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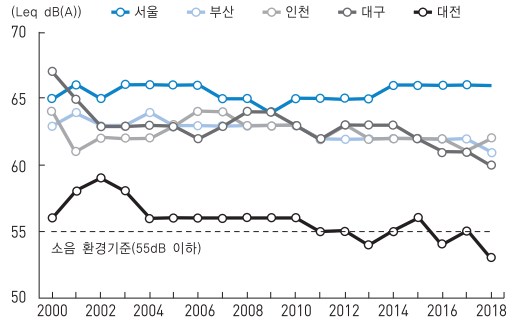
2)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 2019;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 2019.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2000년대 이후 주요 광역시 대부분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그림 IX-9).

[그림 IX-9]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8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일상생활에서 소음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 관련 민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약 87%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다(표 IX-5). 층간소음은 2002년부터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층간소음 보다는 공사장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소음·진동 분쟁의 80% 이상을 공사장 소음·진동이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12년부터 수도권 을 시작으로 층간소음 상담·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014년 전국으로 확대). 2012년 약 7,000건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화상담 후 방문 상담이나 소음 측정을 실행하는 현장진단 서비스는 2012년 약 1,800건 수준에서 2018년에는 약 1만 건까지 증가하였다(그림 IX-10).

〈표 IX-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2000-2018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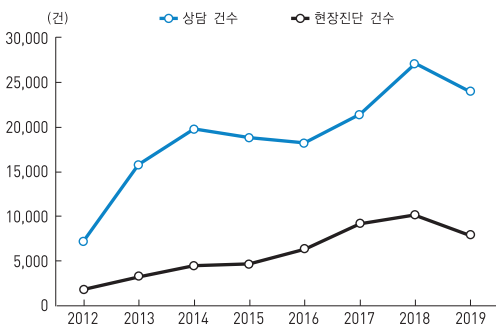
연도	소음 및 진동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일조/해양	기타
2000	79	12	4	0	0
2001	140	17	10	0	1
2002	256	32	5	0	4
2003	316	19	10	0	4
2004	365	17	11	5	4
2005	338	19	8	6	13
2006	352	25	9	1	9
2007	335	21	8	15	8
2008	329	21	5	22	6
2009	385	18	4	21	12
2010	274	9	9	12	17
2011	280	19	4	6	12
2012	344	27	7	17	14
2013	287	26	8	19	17
2014	487	28	5	18	22
2015	406	15	5	13	24
2016	310	16	2	25	13
2017	334	3	1	18	13
2018	462	6	6	16	30

주: 1) 중앙환경분쟁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건수를 합산한 값임.

2)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IX-10〕 중간소음 민원 상담 및 현장진단 건수, 2012-2019



주: 1) 상담 건수는 중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콜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임(중복신청 및 중간소음과 무관한 문의 제외).

2) 현장진단 건수는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및 소음 측정을 요청한 건수임.

출처: 한국환경공단, 「중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19년 민원통계현황」, 2020.

환경관리

정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분야 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9%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2.82%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1.86%까지 떨어졌다. 또한 해당 비율은 2011년에 2.11%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1.8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표 IX-6).

환경분야 예산을 환경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질 보전이 환경분야 예산의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을 정점으로 최근에서는 비중이 조금 감소하였다. 상수도, 대기보전, 자연보전, 폐기물관리 등은 각각 환경분야 예산의 5~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연보전 영역의 비중이 2005년 3.5%에서 2017년 9.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보호지출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지출은 국제표준에 따라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

〈표 IX-6〉 환경분야 예산, 1995-2018

연도	예산액(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1995	17,801	2.39
1997	27,747	2.82
2000	30,581	2.44
2005	35,578	2.12
2006	33,978	1.94
2007	32,837	1.86
2008	36,568	1.87
2009	42,101	1.94
2010	46,740	2.07
2011	49,741	2.11
2012	51,496	2.07
2013	54,458	2.07
2014	56,119	2.04
2015	59,389	2.07
2016	59,695	2.02
2017	60,232	1.99
2018	59,572	1.80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IX-7).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폐수 영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이 포함된 폐기물 영역의 지출은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포함된 대기 영역의 지출은 기업부문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의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 2.83%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

〈표 IX-7〉 환경보호지출, 2004-2017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4	22,372	2.55	15.5	38.6	26.4	19.5
2005	24,017	2.61	16.1	38.5	25.2	20.2
2006	26,463	2.74	17.4	38.4	24.7	19.6
2007	28,675	2.75	18.9	37.7	23.9	19.5
2008	30,188	2.73	19.0	37.4	24.3	19.3
2009	32,629	2.83	17.2	37.9	24.6	20.3
2010	32,880	2.60	17.4	36.8	25.8	20.0
2011	33,784	2.54	17.3	36.5	26.4	19.8
2012	34,547	2.51	18.0	38.8	23.0	20.2
2013	35,169	2.46	16.6	39.2	23.3	20.8
2014	35,586	2.39	17.2	39.9	22.6	20.3
2015	37,025	2.37	17.3	40.8	22.4	19.5
2016	38,713	2.36	17.7	41.3	22.4	18.6
2017	39,796	2.30	17.6	42.2	22.3	18.0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2)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환경보호 국민지출(A표) 금액임.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이다(표 IX-7).

환경분야 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은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